"더 빠르게" vs "더 천천히"…헌재 '尹 탄핵심판' 속도는?

탄핵소추단 '선제적 자료 제출'…尹대통령 '미수령·미제출'
내일 첫 재판서 계획 수립할 듯…증인신문·사실조회 관건

'12·3 비상계엄'으로 말미암은 탄핵심판의 속도를 두고 한쪽은 신속히 할 것을, 다른 한쪽은 신중할 것을 주문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준비 중이다.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임하는지에 관계 없이 신속하게 절차대로 주장하고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단은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수집한 계엄 관련 본회의·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자료 등 관련 자료도 선제적으로 제출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제출을 요구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도 탄핵소추단이 나서서 제출했다.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질 경우 실시될 차기 대선 시간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관련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으로 맞서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3일 "헌재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며 불만을 표했고, 다음 날에는 "그런 일(대통령의 파면)을 다루는 재판은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평하며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헌재가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가 발송하는 서류를 일절 접수하지 않고 제출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당일 퇴근 시간 무렵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충격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판결을 통한 분위기 반전을 노리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

'신속'과 '신중'이라는 상반된 주문을 받아 든 헌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헌재가 양쪽의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사실조회·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 주에 몇 회 재판을 여는지에 따라 심판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헌법재판소·탄핵소추단 탄핵심판 진행 상황

윤석열 대통령 측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소추단
탄핵 심판 관련 절차 신중,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 주장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입장	탄핵심판 조속한 결론 통해 국정 혼란 최소화 주장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 발송 서류 미수령,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및 포고령 제출 명령 불응 등 미제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에 20일 탄핵심판 서류 정상 송달 간주	국회가 수집한 계엄 관련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영상 자료 등 선제적 관련 자료 제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제출 요구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도 제출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상황, 6인의 '불완전 합의체' 탄핵심판 심리 불가 취지	'6인체제 심리·변론가능' 확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 관여 석동현 변호사, 장외 여론전 주도. 변호인단 구성 지연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소송 위임장도 미제출	26일 재판관 회의 개최, 탄핵심판 관련 사항 논의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 구체적인 변론 계획 수립 예정	24일 대리 법무법인 6곳 통해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 제출

증인 신청, 사실 조회·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 관련 소요 시간·주당 재판 처리 상황 등에 따라 심판 시간 단축 혹은 연장 전망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기획에 상당히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비선·수첩' 노상원 검찰 송치

계엄 기획 '北공격유도'·'사살' 등 메모…검찰이 '키맨' 조사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오전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치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노 전 사령관은 호송차로 이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해 직접 소통했느냐', '수첩에 누구를 사살하라고 썼느냐',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면서 '사살 대상이 누구였냐', '북한 공격을 어떻게 유도하라고 했냐'는 질문에 취재진을 응시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과 계엄 당일인 3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사조직 '수사 2단'을 60여명 규모로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정치인, 판사 등에 대한 '수거', '사살' 등이 적힌 메모를 확보하고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계엄 모의 과정의 핵심 인물이자 이번 수사의 '스모킹건'(핵심 증거)이 될 수 있는 수첩을 남긴 노 전 사령관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후속 조사에 나서게 된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해왔다. /연합뉴스

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헌법원칙 위배 아냐"

백혜련 의원에 답변…"탄핵 의결 전 제청 및 인사청문 요청 완료"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이 11월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입장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다투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가 지명돼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헌재, '6인 체제 심리가능' 재확인
내일 尹 탄핵심판 예정대로 진행

첫 변론준비기일 앞서 오늘 재판관 회의…국회 대리인들 소송위임장 제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지난 24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날 6인 체제 탄핵 심리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한 헌재 입장을 묻자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두고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진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소송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17일 준비명령을 통해 이날까지 제출을 요구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발송 송달을 하고 관저에 우편 서류가 도착한 20일에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탄핵심판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준비명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단이 불출석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면 27일 변론준비기일을 미루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에 의하면 종료하게 돼 있는데 속행하는 게 상당(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속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되, 공판 준비를 계속 해야 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황운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즉각 체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환 불응 尹, 별도 입장 없이 '침묵'

석동현 변호사 출근 안해…26일 이후 낼 입장 준비 매진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의 비공식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석 변호사는 17일, 19일, 23일, 24일 잇따라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 등을 전해왔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오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만큼 이날 언론 접촉 없이 탄핵심판과 관련한 입장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성탄절 다음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모든 문제를 다 발표한다는 뜻은 아니다. 27일에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날 한 언론이 윤 대통령이 전관 변호사에게 7억원의 수임료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하자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와 공수처 등에 대리인 위임장,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연합뉴스

CMYK